



# 도의회 광장

2021  
**11**  
제79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03/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가을, 그리고 제주의 바람** 역새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일렁인다. 바람은 한라산을 타고 내려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수많은 오름을 쓰다듬으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과 인내로 달려온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는 듯하다. 기다렸던 가을, 만추다. / 대정읍 송악산 자락에서

##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교육행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회기에 돌입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질문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

될 예정이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안전심사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의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위는 오는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 “민선7기 제주도정 점검·평가, 내년 예산은 도민일상 회복 집중”

##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좌남수 의장은 11월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속에 도정 질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들 걱정하는 도정 공백은 없는지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어 “탄소없는 섬 제주의 구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제주도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대전환하고 조직, 예산, 제도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청정 제주 바다야말로 지역주민들과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이고 소득원으로, 최근 붉어진 하수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

해서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관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관운영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 탄소 없는 섬 제주 2020, P4G 에너지분야 최우수 파트너십

### 제주도·도의회 P4G·외교부 공식 초청, COP26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제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인 CFI2030이 P4G(Partnering for

Green·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트너십을 수상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목표로 정부기

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의체다.

제주도의 CFI2030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보급 등 지난 기간

의 성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사회 구축,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상생 전환 목표·비전에 대한 제주-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민·관 협력기관들의 파트너십에 주목하여 에너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50여개 나라의 정상급 인사와 20여개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 ▷나라별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P4G, 외교부 공식초청에 따라 COP26에 참여해 최우수 파트너십 수상에 이어 제주 사례를 전파하고 ‘탄소중립 Korea, Carbon Free Island’를 주제로 공식 세미나를 진행했다.

## 제주-IUCN, 환경과 함께 하는 삶 만든다

### IUCN 사무총장 면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1월 8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홍보관 파빌리온에서 브루노 오버레이 IUCN 사무총장과

만나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 제주 측에서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임수석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등이 자리했으며, IUCN 측에서는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과 안토니아 미하일로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좌남수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협력사업 공동 추



진 인건으로 △제3회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운영 △세계

환경허브도시 협의체 구축 협조 등에 대해 설명하며 IUCN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산·인사 등 경영 전반 문제 심각”

## 제399회 임시회 폐회사

좌남수 의장은 11월 3일 열린 제 39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 문제가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의 경우 예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게다가 컨벤션센터의 경우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모두가 이에 불응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마저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의 미확보, 도민과의 소통 부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사례들이 지적되었으며 개선요구 사항이 많다.”며, “이는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관리부실 책임도 크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했던 경영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며, “도 전체 16개소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도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의 전면적 개선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영혁신을 위한 후속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93건이 통과됐다.

## “환경보전기여금, 국정 과제로”

### 송창권 의원, 5분발언



송창권 의원(사 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발언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라며,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 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그리고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창권 의원은 “그런데, 제주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우리 세대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인구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생활 폐기물 및 하수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환경을 지속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며, “제주도 정에서는 이전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꽃자왈 보상대책 마련 돼야”

### 조훈배 의원, 5분발언



조훈배 의원(사 진·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

언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꽃자왈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꽃자왈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유권 재산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훈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풀지 못한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와 갈등

이 2021년도 내 땅, 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불통 행정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훈배 의원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꽃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때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훈배 의원은 “제주의 환경가치를 살리고, 꽃자왈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꽃자왈 정책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정책공조 시동

###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3일 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함께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추진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좌남수 의장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발맞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주형 뉴딜 2.0 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해 2022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외에 도민 숙원사업인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도와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 속에 추진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11월 3일 도청 탐라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법’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

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제주도와 공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의회,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숙의민주주의 실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국 최고'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과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주민

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 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 중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

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서 경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고,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시 적용했었던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

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장한 전국 최초 조례다.

또한 우수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손유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정민구 의원이 개정에 참여한 조례로 제주지역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인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전국 최초 조례다.

이 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함에 따라 4·3지방공휴일이 2022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되어 4·3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승아·한영진 의원, 위민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과 한영진 의원이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행사다.

이승아 의원(사진 왼쪽)은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문화도

시 조성 200억 원 예산 확보, 제주도 문화도시 예비 지정 등 지속발전이 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제주 만들기 위해 도민·행정·의회가 함께하는 협업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영진 의원(사진 오른쪽)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4건의 조례를 제정했고, 도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의료형평성 보장을 위한 3건의 조례 제정, 도민안전 및 지속가능 제주를 위한 2건의 조례 등 모두 9건의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박호형·김황국 의원, 스포츠관광학회 공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김황국 의원이 10월 21일 한국스포츠관광학회로부터 체육정책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호형 의원(사진 오른쪽)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정, 읍·면·동 체육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 등 체육분야 정책 제안을 했다.

김황국 의원(사진 왼쪽)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활성화, 도민의 공공스포츠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제안하는 한편 명예도민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인권의 도시로 지향하기 위한 제안 등 체육분야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 I 행정자치위원회

# “도민 60.2% 제주도지사 권한 분산 필요성 공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미래연구원 공동 도민인식조사 결과

제주도민 10명중 6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제주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은 10월 21일 지난 2021년 9월 7일~1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한라일보 및 제주의소리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획됐다.

도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60.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1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8.5%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59점이다.

이와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53%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49점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9.2%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 30.6%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0.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2.83점이었다.

이와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 기업활동에 편리한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현행 유지 12.9%, 전면 수정 15.7%, 부분 수정 71.4%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도민 87.1%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 중점을 뒀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순이다. 2순위 응답에서는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 14.7%로 나

타났다.

이밖에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현재의 계획을 확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추가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응답

이 68.7%이고,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4.8%로,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이 83.5%로 나타났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는 지난 9월 7~16일까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 지역할당 추출방법으로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면접 조사법으로 진행됐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사보류’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일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해당 종합계획에

대해 추가 용역을 벌여 복지, 환경, 1차 산업 등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 I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위드 코로나 앞둔 제주, 일상회복 로드맵 필요”

## 보건복지여성국 등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0월 21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고은실 위원이 위드 코로나 시행시기를 묻자 임태봉 보건복지

여성국장은 “백신 접종률을 감안할 때 11월 1일 또는 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아 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전 환한 해외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폭 증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 실정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게 시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만 바라 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택치료를 따른 병원 연계 방안,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등을 주문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지금 시점은 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제주도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관광업계 등의 기대가 크데 민간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며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임태봉 국장은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 80%를 가정한 것인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협의체를 포함한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특성에 맞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중심 치매 대응 정책 마련



의원연구단체인 우리제주복지연구회(대표 김대진 의원·사진)가 11월 5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공선희)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대응 정책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치매환자 유병률, 고령화되고 있는 제주의 치매현황과 치매대응 사각지대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치매 현황과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정책’ 연구과제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김대진 의원은 “고령화되는 제주 사회에 치매환자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매국가 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이 제주에서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의원은 “고령화되는 제주 사회에 치매환자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매국가 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이 제주에서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I 환경도시위원회

# 감귤주스 적자, 사업실적 점검 필요

제주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는 10월 25일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은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미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감귤주스 사업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감귤 수매율이 2019년에 비하면 올해 반토막이 나고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결정할 것은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6개월 정도 감귤주스 사업에 대한 적자 폭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결과 2공장을 폐쇄하는 방안과 감귤주스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종합적으로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개발공사 직원들의 삼다수 무단반출 사례와 2017년 공공구매 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학 사장은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평가 동의안 ‘제동’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는 11월 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의 선하지(고압선이 가설된 토지) 전자기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앞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해 9월 도의회 심사에서도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약 5.63km<sup>2</sup> 해역에 2년간 총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입해 5.5MW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등 104.5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 이듬해 1월 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 I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문학사 정립, 조직운영 고심해야”

제주문학관, 제주도립미술관 등 현장의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중 제주문학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을 현장방문했다.

제주문학관은 제주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됐으며, 10월 23일 개관했다.

이어 제주도립미술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제주’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 및 제2회 비엔날레 취소

등에 따라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작가의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13명(팀)이 참여해 미디어아트 및 설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문학관이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근



관장제 도입 및 문학전공 학예연구사 배치 등 조직운영에 고심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화된 코로나 팬

데믹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강조했다.

# “ICC제주 총체적 난국, 특정감사 필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0월 21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관광국, ICC제주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은 “ICC제주는 최근 5년간 700여 건의 100억 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안창남 위원장은 “특정감사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황국 의원은 “ICC제주의 경영실적을 보면 올해 말 기준 추정 손실만 43억 원이며 부채는 106억 원”이라며, “지난 3월부터 제주도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전방위 제보가 들어갔다. 인사권 남용, 갑질, 근태 위반, 국고보조금 집행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은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 제보가 쏟아지

고 있다.”며, “제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나.”고 따져 물었다.

박호형 의원 역시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한 임원은 건물 내 TV와 침대를 놓고 개인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I 농수축경제위원회

## 전기차 연관사업 규제자유특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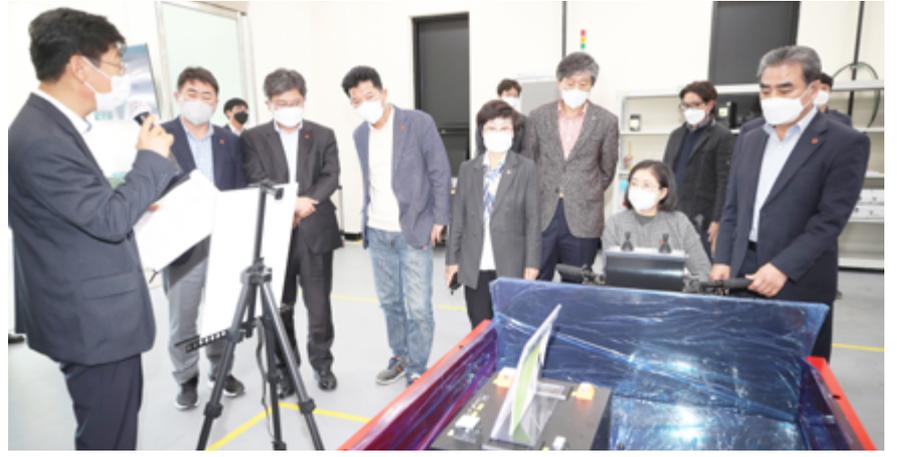
## 제주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8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전기차 연관사업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참여 업체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신청 중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한 제품에 대해 개발과정, 상용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들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으로 5개 제품에 대해 자체 실증을 완료하고, 올해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증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추진된 전기차충전서비스 4개 사업은 실증특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참여업체와 관계



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신청은 실증특례 참여업체들과 연구진, 행정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본다."면서, "그동안 의회에

서도 전기차 연관사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제 가시적 성과가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산업이 지역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일과 삶 재단 조례 상정 안 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지난 7월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원간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11대 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3년간 운영된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기에 운영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취·창업률과 미래

일자리 전환에 대비한 교육 등에 대한 평가사항을 재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산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1차 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달리 일자리 부족보다는 인력 부족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도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1차·3차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심도있게 논의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나, 일자리재단이 설립된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현길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 기구로서 일자리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일자리재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세밀한 설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라며, "현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는 않지만, 일자리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 I 교육위원회

## “공론화 없이 학교설립 어렵다”

##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35년 만에 추진되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위는 10월 14일 제399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민구 부의장은 “35년 만에

고등학교가 새로 세워진다는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발표 전에 도민과 학부모, 학생, 의회 등 도대체 누구와 토의를 했다. 도교육청이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한 점이 오히려 여지가 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면 예산 심사에서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공남 위원장도 “과밀학급 해



소 등을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계고를 신설하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8월 30일 도교육청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면서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도민사회 내 공론화 과정 없이 1달여 만에 급하게 확정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 위원장은 “추진하는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청회나 도민사회에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예산 심사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둘째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포함



강연호 부의장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0월 26일 열린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강연호 부의장은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다자녀 학생 기준(제2조 정의)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준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의 범위(제5조)가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강연호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 대상 학생은

기존 2만1,475명에서 4만2,396명으로 증가되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 수혜를 받는 주요 지원사업은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규정(2조와 5조)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생생 의정활동

### 조례소개

## 제주의 상징물 꽃 나무 새를 아시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체계가 마련된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사진·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나무·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 '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정의 '이미지상징물'을 '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나무(녹나무)·새(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민과의 정책 협의 '협치' 근거 마련

###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화를 위한 조례가 11월 3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사진·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이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민관협치'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한 도

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고, 5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정책사안에 대해 도민과 도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협치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과 관이 함께 공적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주제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준비하여 발의하였으며, 앞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글로 있는 제도가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60년 역사 탐라문화제, 운영근거 마련해야

### 탐라문화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추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사진·제주시 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60년 동안 이어온 제주도 대표

축제 탐라문화제를 이제는 제주도 자산으로서 육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라문화제는 1962년 제1회 제주예술제에서 1965년 제4회 한라문화제로 이어오다 2002년 제41회 탐라문화제로 개칭하여 올해 60돌을 맞이하게 되었고, 2002년 탐라문화제로 개칭하며 2003년 2004년까지 3

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지역민속축제로 선정하는 쾌거도 있었다.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원류인 탐라국의 터전으로서의 제주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제주인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내려는 개척정신과 그 속의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어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탐라문화제는 제주 문화예술의 변화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펼칠 수 있는 장(場) 역할을 하였고, 제주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서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며 제주문화예술인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전

통문화와 현대의 문화예술 양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제주인들의 축제이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의 원형문화를 간직한 대표축제가 60년을 이어오기는 쉽지 않으며, 이런 향토문화예술을 담고 있는 탐라문화제는 육성 근거와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탐라문화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탐라문화제의 계승발전하고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강하게 피력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세 감면 추진

###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조례 개정



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기업종의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을 감면하는 제

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첫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2022년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감면액 7억원) 둘째,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

본금 30억초과 사업자 제외, 감면액 23억원), 셋째,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감면액 3억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그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발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의 장

##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와 제주평화연구원(원장 한인택)은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한라산홀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을 개최했다.

강민숙 위원장은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평화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실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하지만 평화

의 섬 선언 16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도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를 근거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으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상생·화해의 정신으로 제



주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주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강민숙 위원장은 "이번 2021년 지방자치발전포럼(한국지

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평화의 섬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특별자치분권 의회 위상강화 방안 모색

##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도정의 정책결정단계에서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스크린 과정을 통해 의회의 실제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전문연구기관 설치나 의원과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의 자치교육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산홀에서 개최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션'을 통해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좌장을 맡고,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노수 교수는 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사무처장 임기제 도입,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을 '복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정책연구위원 정수 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장애의원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 제도 시범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이, 제주연구원처럼 제주도에도 의회연구원을 둬야 한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육발전연구회,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 교육의원)는 10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죽음교육 정책 추

진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 등 관련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김장영 의원, 송창권 의원을 비롯해 서울대 의과대학 정현채 명예교수, 제주대 윤용택 교수, 도교육청 조성진 학생건강추진단장, 세화중 송시태 교장, 국제뉴스 문서현 국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윤미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서부지역 마늘 피해 점검해야

## 대정읍 긴급대책회의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사진)이 10월 27일 대정지역 마늘피해 방지를 위해 대정읍사무소에서 긴급대책회의

를 주재했다. 긴급대책회의에는 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 대정농협조합,



대정읍리장협의회, 대정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그리고 농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인력난과 급상승한 인건비 문제로 제주지역 마늘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추석 이후 10월 중순까지 고온다습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대정읍, 안덕면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조기 파종한 마늘에

심각한 열 피해와 고자리 파리병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병우 의원은 "지속적인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대정읍, 안덕면 중심의 서부지역의 마늘이 생육 불량 등과 같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①

## 돌음재기 (명사) 달리기 경주

<예문>

“저 알동네 개똥이 아시가 돌음재기 잘 하여진덴, 빨라진 책 아모영이나 돌을락 싹뻑하단, 올캐로 제주도 대표선수영 부뎨 미쳐보젠 돈단 즈롭 이서 푸더지뎡 나브작이 었더져부난 사름덜은 ‘에이 제나잘관이여’ 글 암젠 하여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                    |
|-------------------------------------|--------------------|
| 아시:아우                               | 부뎨:붙어서             |
| 돌음재기, 돌을락, 돌음작:달리기 경주               | 미쳐보젠 돈단:따라잡으려고 뛰다가 |
| 하여진덴:할 수 있다고                        | 조롬이서:공무니에서         |
| 빨라지다:되바라진 척 앞에 나서는 것                | 푸더지다:넘어지다          |
| 아모영이나:아무하고나                         | 나부작이, 나부책이:납작이     |
| 올캐로, 올캐:제대로                         | 잘관다리:잘코사니          |
| 싹뻑하단, 싹뻑하단, 싹뻑하단, 싹뻑하단:겨루다          |                    |
| 엿더지다, 엿대다, 엿더지다, 엿대다:배를 바닥에 대고 쓰러지다 |                    |
| 뒤뻑라지다, 뒤뻑라지다, 뒤뻑라지다:되바라지다           |                    |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8월 ~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8일

## 생활 & 법령뉴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해왔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고 있어 10월 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차·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에 대하여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Q&A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원 기고

##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마치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월1회 현장 답사를 통해 4·3유적지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5월에는 주정공장터와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6월에는 수악주둔소와 정방폭포, 7월에는 관음사와 이덕구 산전, 9월에는 백조일손묘와 중문성당, 시오름주둔소, 10월에는 북촌마을 4·3길을 방문했다.

제주4·3유적지는 4·3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가치관 등 총체적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증거로서 그것이 지닌 역사적, 학술적, 상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귀중한 유산으로서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기성세대의 중요한 몫이다.

그동안 기록과 증언을 통해 밝혀진 4·3유적지만 해도 800여 곳이 넘는다. 그러나 이를 보존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미래세대로의 전승과 대중교육으로의 전환이 부진한 형편이다. 4·3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보호 및 복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지원체계 정비를 비롯하여 유적지 자료의 기록화·정보화, 과학적 조사·연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과 단체 등 소수의 책임과 노력만으로는 4·3유적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73주년을 맞은 4·3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2022년 정부예산안에 4·3 관련 국비 1908억(배·보상 관련 1810억 포함) 편성이라는 큰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제주4·3을 기억하는 것조차 금기였던 시대를 지나, 제주도민의 염원과 온 국민의 공감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유적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대중의 공감과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4·3특별위원회의 현장 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문화·예술 활동, 기념사업 등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지원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4·3유적지가 잘 조성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농업분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없어야



최근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감자와 양상추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생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미 배고픔을 넘어서 우주로 향하는 첨단과학과 기술을 손에 넣었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로 농업에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인류의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은 힘들다. 외국의 기업농과 비교해 규모화가 부족한 우리나라 영세농업인들이 더욱 힘들다. 특히, 도서지역인 제주는 물류비 부담은 물론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수와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더딘 상황이다. 파종과 전정, 수확과 같은 정밀한 작업은 농업인들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은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 2,4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4,000만 원 이상으로 전국 평균의 1.7배가 넘고 있다. 여기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

하고, 생산량이 적으면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다 보니 높은 경영비 부담과 함께 농업의 지속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제주농가의 영농비 부담 문제는 제주도정도 잘 인식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5,931농가에서 6,771대를 임대했다. 지난 2020년에는 8,228농가 9,540대를 임대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농작업의 특성상 유사한 작업시기로 농기계 임대가 어렵거나, 센터의 위치가 너

무 멀어 임대는 엄두도 못내는 취약지역이 있다. 최근 도정에서는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이 취약지역 중 한 곳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사업 첫해에는 임대실적이 낮았지만, 이듬해부터 본 센터보다 취약지역에 위치한 분소의 이용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사업에서 소외받던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와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정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임정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회가 11월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병우 의원, 김태엽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민 차관은 제주도 평화대의 협력과장으로부터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는데

이어 서귀포시로부터 알뜨르 비행장의 현황을 전해 들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직접 나서 오랜 고충과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민 차관은 “오랫동안 진척이 없이 힘든 상황이었는 데, 올해부터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이미 협의가 됐다. 조속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제주-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10월 30일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중)와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의정발전 및 정책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간 연찬회, 세미나 공동개최 추진 등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상

호 간 인사교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좌남수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22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 제주체육진흥포럼 간담회 개최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 이승아 의원(사진)이 11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시대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현황과 1인당 시설 면적, 인구 대비 공급 차이, 접근성 및 운영 현황 등 공공체육시설 특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 이승아 의원(사진)이 11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시대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현황과 1인당 시설 면적, 인구 대비 공급 차이, 접근성 및 운영 현황 등 공공체육시설 특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환경에 맞는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의 제시와 체육환경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명확하게 도출하기도 했다.

이승아 대표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확대는 물론,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 및 경제효과에 큰 기여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도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변화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청소년, 무용교육 받을 권리 있다

재정경제포럼·교육위 토론회 공동개최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이경용)은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와 공동으로 11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용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길복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장의 ‘제주의 청소년!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민호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송미숙 진주교대 무용교수, 김현주 제주대 체육학과 전임연구원, 김태관

제주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가해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으로 도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무용협회 제주도지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용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경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 다소 소외되고 있는 무용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제주 무용교육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주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방안 모색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의원)와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 고현수 의원)’은 11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가 ‘한국의 플랫폼운송사업과 영국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정책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권 교수는 영국의 보편적 이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겸용 이동수단의 유용성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신임 공보관 김석주 전 편집국장 임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6일 김석주 전 제주매일 편집국장을 신임 공보관으로 임용했다.

김석주 신임 공보관은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민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제민일보 편집국장, 제주매일 편집



국장, 제주도기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